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86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1. 26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소병훈 · 박홍배
민홍철 · 김문수 · 황명선
정동영 · 안호영 · 강준현
박민규 · 허종식 · 박희승
이춘석 · 김윤덕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약취(略取)·유인(誘引) 또는 유기(遺棄)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(離脫)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·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및 정신장애인, 치매환자(이하 “실종아동등”이라 한다)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, 실종이나 사고에 특히 취약한 치매환자 및 장애인 등의 경우 위치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·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없으며, 다만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서의 장이 수색 또는 수사를 실시하고, 이 경우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

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경찰청장은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장애인 및 치매환자(이하 “지적장애인등”이라 한다)의 실종 등으로 생명·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적장애인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등의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도록 배회감지기 등 ‘위치확인 전자장치’를 보급하고,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3 신설).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3(지적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비용 지원) ① 경찰청장은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람(이하 “지적장애인등”이라 한다)의 실종 등으로 생명·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적장애인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등의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전자장치(이하 이 조에서 “위치확인 전자장치”라 한다)를 보급하고,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보급한 위치확인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·조회·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.

1.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
2. 지적장애인등의 보호자가 지적장애인등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상시 수집 및 활용 절차, 제2항에 따른 자료 보존의 방법 및 절차, 제3항에 따른 열람·조회·제공·공개 방법 및 절차, 제4항에 따른 폐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8조의3(지적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비용 지원) ①</u></p> <p><u>경찰청장은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람(이하 “지적장애인등”이라 한다)의 실종등으로 생명·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적장애인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등의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전자장치(이하 이 조에서 “위치확인 전자장치”라 한다)를 보급하고, 이에 필요한 비용의</u></p>

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보급한 위치확인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·조회·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.

1.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

2. 지적장애인등의 보호자가 지적장애인등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
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상시 수집 및 활용 절차, 제2항

	<u>에 따른 자료 보존의 방법 및 절차, 제3항에 따른 열람·조회 · 제공·공개 방법 및 절차, 제 4항에 따른 폐기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</u>
--	--